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전북형 메가시티 초석”

김윤덕 의원, 완주 찾아 “완주 대변역 이뤄낼 것”
중대형수소차 특화도시 초남이 성지 개선 등 6가지 지역 공약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완주의 대변역, 전북의 핵으로 거듭나는 대변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은 완주군을 “완주-전주, 완·전 통합특례시 출범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완주의 대변역, 전북의 핵으로 거듭나는 대변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완·전 통합특례시 지정으로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 ▲중대형수소차 특화도시 조성, ▲시외직경 제1판교 설립 ▲이동청소년 전용 체육관 조성 ▲원승지구 저수지 조성 지원 ▲천주교 대표성지로 초남이 성지 개선 지원 등 6가지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으로 전북형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광역시 없는 전북이 살아남는 길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수조원 단위의 광역교통망 예산을 확보하고, 새만금-군산-익산-완·전 통합특례시를 잇는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지겠다”며 “광역시 없는 전북이 살아남는 길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수조원 단위의 광역교통망 예산을 확보하고, 새만금-군산-익산-완·전 통합특례시를 잇는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통합 방식에 대해 “완주 군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치고, 완주 정치권에게는 기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군민과 정치권이 공감하는 협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완주-전주가 아남의 길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수조원 단위의 광역교통망 예산을 확보하고, 새만금-군산-익산-완·전 통합특례시를 잇는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완주-전주가 타시·도에 대응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필수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완주와 전주가 하나로 뭉치려면, 전북을 이끄는 핵, 완주와 전주가 같이 걸치는 길을 열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국가 기상업무 기본계획 확대·개편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는 예·특보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 업무에 관한 기술 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율러, 현행법이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해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예·특보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며, 태풍 예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해양기상정보와 항공기상정보에 대한 제공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라며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기상정보를 구체화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형 혁신마을’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농촌미래 주관 세미나 개최
민주 도당 지선 공약 가능성



시단법인 농촌과미래와 전북대 식물화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형 혁신마을 추진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방소멸 위기대응 방안으로서 ‘전북형 혁신마을’ 구상이 제안됐다.

시단법인 농촌과미래(이사장 이귀재)와 전북대 식물화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형 혁신마을 추진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귀재 전북대교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과 자치단체, 대학이 문제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세미나 개최 동기를 밝혔다.

이귀재 교수는 “그동안의 농업과 농촌사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었다.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서 매출이 올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리라는 사고는 한계가 있다”라며 “또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정책금융만 제공하면 농촌

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인식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서 전북형 혁신마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청년과 귀농귀촌자들의 요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맞춤형 정책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농산물개발과 재배로 고소득 보장 ▲혁신적 사회주택으로 주거 문제 해결, ▲의료, 교육 등 생활인프라의 구축이 하나의 지역공간에

서 이뤄지는 개념이 바로 전북형 혁신마을”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 후원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은 지방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전북형 혁신마을은 농도전북의 특성을 살려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공공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에 세계 최대 K-POP 공연장 조성”

안호영 의원, “한류 확산, 문화수도 선점 기회로 도내 예술인들 세계 진출 문화보부상 되도록 지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1일 새만금에 세계 최대의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전북을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K-POP 아이돌인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차트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을 문화수도 전북의 위상을 선점



의 영상제작 스튜디오를 건립 할

것”이라며 “전북관광공사를 설립,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원패스투어 시스템으로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즐기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또 “세계잡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700만 캠프인인 전북을 찾게 하고, 한식과 한복, 한옥과 같은 한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면서 전북의 예술인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문화보부상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섬진강르네상스, 중단 없이 완성할 것”

심민 임실군수
군정 첫 3선 도전

예산 8000억 시대 개막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등 10대 주요 공약 발표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 3선 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심민 임실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임실 군정 최초의 3선 군수에 도전한다. <관련기사 1면>

심민 군수는 지난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 3선 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심 군수는 지난 2004년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이후,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군수에 당선돼 8년 동안 임실군정을 이끌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역대 임실군수는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며, 온전히 임기를 마친 이가 없었다.

심민 군수는 기자회견 첫 일성으로 “제발 무사히 임기를 채우는 군수가 돼 달라는 군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의 고리를 끊겠다는 다짐과 함께,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군민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 누구보다도 청렴한 선출직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적 마무리를 원하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주어졌던 소

명을 다하기 위해 3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햇볕을 하느니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사업의 연속성, 안정적 군정운영을 통한 군민행복을 최고의 신념으로 삼아 민선 8기 임실군수 도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심민 군수는 ▲예산 8000억 시대 개막, ▲육정호 명품관광 종합개발을 통한 ‘섬진강르네상스’, ▲오수지역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오수·임실 제2농공단지 10만평에 팻산업, 자동차 부품 등 첨단 미래공장 유치 및 일자리 1000개 창출, ▲오수 농공단지 등 관내 6개 지역 아파트 310세대에 도시

가스 연결, ▲구 제일극장 및 임실축협 자리 주상복합단지 조성 및 관촌·오수에 공공임대주택 조성, ▲농촌 일손부족 해결, ▲풍수해예방사업 마무리, ▲중학생·고등학생까지 봉합인재학당 확대 운영, ▲64세 이상 고령층 복지서비스 확대 등 10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심민 군수는 “중단없는 군정운영과 막힘없는 임실발전을 위해 심민이 희망의 길을 걸겠다”면서 “민선 6기와 7기에 추진한 정책들을 중단없이 반드시 완성하고, 1000만 관광 임실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사원 감사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 추가

민주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부, 예산결산특위)이 지난 1일 감사원이 감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산감사 이후에도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결산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순의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순의액이 90.4조 원에 달한다. 전기오류수정순의액은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를 말한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순의액 발생액 90조4,161억원을 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33조1,787억원(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 28조1,004억원

(31.1%), 해양수산부 8조7,545억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5156억원(5.5%)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에, 감사원이 감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이 기재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회계에서 매년 심각한 국가재무제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원 결산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중대한 오류가 빈번한 부처에 대해서는 단계별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산모들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시장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약속했다.

지난 1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의지와 함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888명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가



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3,207명)는 전년 대비 205명 감소, 최근 5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나날이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산후조리원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원 이용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됨은 물론 프리미엄급 산후조리원 전환에 따라

사회계층 간의 격차 현상 또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조지훈 예비후보는 출산을 제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전주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후유증이나 사회적 문제로 전환함에 따라 산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신생아 돌보기, 산후조리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임신부 케어서비스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유익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체계와 함께 물품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호상 기자